“시민 목소리 듣자” 여수시 소통행정 눈길

300명 이상 동의 때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민청원제 본격 운영
‘민원 SNS 여수신문고’·‘사랑방 좌담회’ 등 열린 정책 자리매김

여수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공을 쏟고 있다.

민선 7기 여수시의 핵심 정책인 시민청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열린 소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본격 운영 중이다.

시민청원 제도는 일정 인원 이상이 청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국민청원과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수시가 처음 도입했다.

애초 여수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로 정했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청원자는 14일 이내 여수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청원자가 권오봉 여수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63건의 열린 시민 청원 중 57건의 일반민원을 모두 종결 처리했다.

청원 등록된 6건 중 500명 동의가 성립된 죽림현대조합 아파트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시장 면담과 답변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영리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외했다.

제외된 청원은 청원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500명 동의 등 청원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은 직소민원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여수시가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열린 청원제도가 단기간에 여수시 정책평가 3위에 선정되는 등 최고 시민 중심 소통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여수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조건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여수시민 한정 청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한 참여를 위해 2019년 운영계획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시는 기존의 시 홈페이지 청원과 함께 온라인 취약 계층의 방문·우편·전화·팩스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 열린 청원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 본래 정책 취지에 맞도록 주민 생활 불편과 정책제안, 미흡한 행정 제도 개선 요청 등에 대해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한정해 청원을 받는다.

시는 또 당초 청원 성립 조건인 500명 동의를 300명 동의로 낮추고 시민들과의 본격적인 열린 소통에 나서고 있다.

나병곤 여수시 시민공감담당관은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민선 7기 핵심 소통공약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한 시민 소통창구가 되도록 청원제도를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행복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SNS(사회적관계망)를 통한 시민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 민선 7기 출범 후 도입한 소통중심 실시간 모바일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제도가 지난해 여수시 정부혁신 자율평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SNS 채널 카카오톡을 활용, 생활불편 민원 접수는 물론 상담 처리 결과까지 실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SNS 여수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민원 여수신문고는 1200여명의 친구 맺기 성과와 도로·교통·보안·관광 등 700여 건의 생활 민원을 접수해 실시간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를 마련, 지난해만 17곳의 현장 좌담회 개최와 함께 올해 역시 매월 2회씩 시민들과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생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생활불편 사항 청취와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열린 청원제도와 온라인 고충처리 제도 등을 통해 시민행복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함께 열린 소통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가 올해도 ‘열린 시민청원제도’ 등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소통행정을 이어간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해만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등 17차례의 현장 좌담회를 가졌다. 〈여수시 제공〉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7일 첫 삽

박람회장 사후활용 성과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조감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추진한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이 7일 박람회장 내 건립부지에서 첫 삽을 뜬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박람회장 내 한화아쿠아리움 광장 옆에 마련된 청소년해양교육원건립부지에서 국회의원, 전남도행정부지사, 전남도의원, 시의원, 청소년 시설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기공식이 열린다.

이 사업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471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 20m 5레인과 다이빙풀을 설치한 수영장과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해양교육 체험시설, 다목적강당, 1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등이 갖춰진다.

앞서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 2017년 19억6000만 원, 2018년 31억85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됐으나 현행법상 지자체인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박람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축 추진이 빠르게 진행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 세계한상대회 10월 개최

국내 최대 한민족 경제대회인 세계 한상대회가 오는 10월 여수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1000여 명의 재외 동포 경제인 ‘한상’과 2000여 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여하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가 10월 22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난해 4월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성공한 후 한상과 지역 경제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시는 특히 이번 대회에서 지역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중 한상기업, 해외바이어 등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업 전시회 참가 기업에 대해 부스비를 지원하고, 수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상기업 청년인턴 채용프로그램에 대해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70여 개의 한상기업이 사전 지원자에 대해 대회 기간 동안 현장 면접을 통해 청년인턴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며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한상대회는 여수시가 가진 경제적 자원과 해양 관광자원을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40년 넘은 낙포부두 대형사고 위험…시설 개선 시급

예타 조사 5년째 지지부진…여수국가산단 운영 큰 지장

광양항 낙포부두가 지은 지 40년이 넘어 시설이 낡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을 위해 2015년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으나 5년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낙포부두는 여수산단 석유화학제품 등 화물처리를 위해 지난 1974년 건설을 시작해 1979년 5선석 규모로 완공됐다.

주로 암모니아나 황산, 질산 등을 처리하는 부두로 이용하고 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 기업의 수출입물량의 절반 가까이 처리하고 있지만, 시설이 낡아 대형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실제 낙포부두는 201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2개 선석이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으로 강등되면 부두가 폐쇄될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0년 전국 55개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도,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항만개조(Port Renewal)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낙포부두는 투자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2015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아 사업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수시의회에 “비용편익분석(BC)이 잘 나오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행기 여수시의회 산단특위 위원장은 “안전성검사 결과 D등급으로 안전 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데도 예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기에 예타가 마무리돼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전남대, 중화학설비 안전센터 10주년 맞아 토론회

전남대학교가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 개설 10주년을 맞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남대에 따르면 중화학산업체의 생산설비 안전관리를 지원해온 전남대 중화학설비안전진단센터 개설 10주년을 맞아 6일 오후 2시부터 여수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에서 기념식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해 최도자 국회의원, 김이곤 센터장 등 안전센터 사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 후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산업 발전 고도화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플랜트와 여수산단 안전 지원 인프라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눈다. 또 중화학설비안전진단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 토론의 시간도 갖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